



▲ 공동대표: 이의영 · 류중석 · 김철환 · 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 김진현 ▲ 정책위원장: 박경준 ▲ 사무총장: 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승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 www.ccej.or.kr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담당 : 경실련 정치입법팀 T. 02-3673-2141 (서희원 팀장, 임정택 간사)

제목 : [보도자료]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총 22매)

보도일자 : 2024. 03. 07. (목)

배포일자 : 2024. 03. 07. (목)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요란했으나 실효성 없어

- 양당 자체 기준 적용시,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진행자 81명 중 10명(일반 전과 보유 53명 중 5명, 재판진행 35명 중 5명)만 걸러져
- 양당 공통 기준 적용시, 6대 중요 범죄(협의) 해당 더불어민주당 39명 중 8명, 국민의힘 20명 중 2명만 걸러져
- 부적격 심사기준의 관대한 적용으로 실효성 없어, 이조차도 예외조항 남발로 공정성 의문

1.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자질의심 및 미달 현역 의원들을 공천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컷오프 명단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천개혁 1순위 과제로 부적격 심사 기준(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이 얼마나 실효성 떨어지는지 조사해 발표한다.

2.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이다. 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하여, 탈당(무소속), 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와, 국민의힘의 공천관

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2024년 1월 16일)을 참고했다.

3. 먼저 더불어민주당 결과이다.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33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기간 재판받을 형이 확정된 의원 총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심사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기간 재판받을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의원 역시 1명으로 나타났다. 양대정당을 종합하면, 일반 전과 보유 총 53명 중 5명, 21대 국회 기간 재판진행 및 형 확정된 의원 35명 중 5명만 양대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된다.

		총 인원	적용 인원	실효성 정도
더불어민주당	과거 전과 보유	33명	4명	12.1%
	21대 국회 재판진행 및 형 확정	22명	4명	18.2%
	합계	(중복제외) 49명	8명	16.3%
국민의힘	과거 전과 보유	20명	1명	5.0%
	21대 국회 재판진행 및 형 확정	13명	1명	7.7%
	합계	(중복제외) 32명	2명	6.3%
전체	전과 보유	53명	5명	9.4%
	재판 진행	35명	5명	14.3%
	합계	(중복제외) 81명	10명	12.3%

4. 한편, 거대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거대양당의 공통 6대 부적격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따져보았다. 거대양당 공통 부적격 심사기준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과 보유 국회의원 25명 중 4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혹은 형 확정자 17명 중 4명, 중복제외 총 39명 중 8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전과 보유 15명 중 1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자 5명 중 1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와, 중복제외 20명 중 2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통기준 해당	적용 인원	실효성 정도
더불어민주당	전과 보유	25명	4명	16.0%
	재판 진행	16명	4명	25.0%
	합계	중복제외 39명	8명	20.5%

국민의힘	전과 보유	15명	1명	6.7%
	재판 진행	5명	1명	20.0%
	합계	20명	2명	10.0%
전체	전과보유	40명	5명	12.5%
	재판진행	21명	5명	23.8%
	합계	중복제외 59명	10명	16.9%

5. 이러한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적격 심사기준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양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를 거쳐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다. 최고위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도 자질 및 의심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다.
6. 이에 경실련은 ①공천기한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것, ②공천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질미달 국회의원 철저히 걸러낼 것, ③현역 의원의 평가 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④ 경실련 선정 자질 의심 및 미달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 등을 촉구한다. “끝” .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 조사결과 :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심사 기준 실태발표

1. 취지 및 배경

-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은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공언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행에서 두 정당 모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하여 부적격 배제 기준을 추가해 발표했으나, 적용 조건을 과도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실제로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양대 정당 공천 기준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컷오프된 의원들이 공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 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하고 엄격한 공천 기준 마련과 투명한 적용을 촉구 하며, 그 첫걸음으로 현역 의원 평가 자료 및 심사 자료 공개를 촉구함.

2. 양대 정당 부적격 심사 및 공천심사 기준

〈표1〉 양대 정당 부적격 및 공천심사 기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적격 심사 기준	<당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 징계 경력 보유자 ▪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었거나,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 : 병역 기피, 음주운정,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 예외 인정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을 통해 예외적으 	<당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천에서 배제됨. 이에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 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과립치 범죄(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공관위 발표>(2024.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4대악 :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p>로 공천 인정</p> <p><특별당규> (2023.0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기준 : 강력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예외있는 부적격 심사기준 : 징계경력보유자, 경선불복 경력보유자, 부정부패 및 선거관련 범죄, 파렴치 및 민생범죄, 학교폭력 하급심 유죄 판결 및 상급심 재판 진행 중인 경우의 규정 삭제 논란 	<p>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 부적격 비리 :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도주차량, 음주운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됨.
<p>심사 기준</p>	<p><당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특별가산점 :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 사무당직자 및 보좌진,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p><공천관리위 발표> (2024.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 기준 제시 이후(24.1.29.)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 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으로 수정. 음주운전과 증오발언 제외하여 논란 	<p><공천관리위 발표>(2024.2.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기여도(15) △당무감사(20) △면접 점수(10)를 非당협위원장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및 사회 기여도(35) △면접(10)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p>경선 기준</p>	<p><당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단 구성 : 권리당원 + 일반 유권자 투표 및 여론조사 실시 권리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50% 이하로만 반영 경선득표율 감산기준 :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3/4 이상 마치지 않고 사퇴한 경우(25%) 감산, 선출직공직자평가 위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 대상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20% 감산), 경선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 받은 경력자(25% 감산) 	<p><당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50%와 유권자 여론조사 50%를 합산하여 실시, 선거인단 투표는 필요에 따라 전화 여론조사로 대체될 수 있음. 우선 추천지역 선정 : 공관위는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지역 선정 <p><공관위 발표>(2024.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은 당원 20%와 일반 국민 80%의

	<p><공천관리위 발표> (2023.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를 대상으로 경선 득표율을 30% 감산, 10~20% 의원에게는 20% 감산 적용하는 새로운 공천 규정으로 논란 	<p>비율로 경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의 비율로 경선 하위 평가자에 대한 조치 : 전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7명)에 대항하는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됨. 하위 10%~30% 사이(18명)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
--	---	--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부적격심사 규정 변경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의 결정이 목표와 다소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특히,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판 진행 중인 논란의 인물들에 대하여 ‘적격’ 판정을 내려, 당의 도덕성 강화 노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음.
- 부적격심사 항목의 적용 조건을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하여 부적격 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러한 기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음.
- 심사기준을 처음에 제시한 5대 혐오범죄 기준에서 음주운전 및 증오 발언을 제외한 도덕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투 운동으로 논란이 된 인물을 포함하여 공천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증폭시켰음.
- 새롭게 도입된 경선 득표율 30% 감산 규정은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긍정적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컷오프 명단 발표와 관련된 논란으로 이어졌음.

○ 국민의힘의 경우

- 자체 후보자검증위원회 부재로, 부적격심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천배제 기준이 협소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윤리적 및 도덕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음.
- 국민의힘 역시 부적격 심사기준 적용 조건 대다수가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로 되어 있어, 부적격 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러한 기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음.
- 컷오프 비율이 예상보다 낮은 10%로 설정되었음.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율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음.

3. 양대 정당 부적격 기준 실태조사

- 취지 : 정당의 전략공천, 단수공천과 같은 방식은 정당의 자율적인 영역에 속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대이자 권리로 여겨질 수 있음.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 요소임. 따라서, 정당이 후보자를 선정할 때에는 단순히 전략적 우위나 당내 지지 기반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 수행에 관한 후보자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까지 심사해야 함. 이는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키우고, 더 나은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양대 정당 모두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원들을 공천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됨. 이에 양대정당 부적격 기준의 실효성 실태를 조사했음.
- 조사대상 :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 경력이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중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을 대상으로 함.
 - 정당 기준은 21대 총선 공천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하였음. 이후 탈당하거나(무소속), 의원직 상실한 경우가 있으나, 본 조사의 목적은 양대 정당의 부적격 기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보는 데에 있으며, 탈당 혹은 의원직 상실한 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공천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기준을 따랐음.
- 조사데이터 : 과거 전과 경력은 21대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전과 내역을 참고하였고, 21대 국회 기간 재판 현황은 시사저널과 아시아경제 등 언론 기사를 참고하였음.
 - ※ 시사저널, 2024.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 21대 의원 28명 아직도 재판 받는다(2024.1.29.)
 - ※ 아시아경제, 2024. ‘사법리스크’ 현역 의원 27명 재판 중에도 ‘총선 앞으로’ (2024.2.16.)

1) 더불어민주당

- 조사 기준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23년 5월 8일 제정된 특별당규의 부적격 심사기준을 참고함. 부적격 기준 중 범죄 내용 및 혐의와 관련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2> 더불어민주당 부적격 심사기준

사유	내용	적용 기준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	강력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일 때의 범죄의 경우, 본인 소명 후 검증위에서 판단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뺑소니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시 윤창호법 시행(18.12.18) 이후 음주운전 적발시 특가법 적용 ‘도주운전자’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분 시(기소유예 포함) 소속기관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시(민사 손해배상 포함) 당 윤리심판원 등으로부터 성폭력 성매매범죄로 제명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242조~245조
	가정폭력, 아동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분 시(기소유예 포함) 당 윤리심판원 등으로부터 가정 폭력 아동학대로 제명된 자
예외있는 부적 심사기준	부정부패(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조세관련법, 변호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조세법 처벌법 위반,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선거관련(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본인의 선거운동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
	사기, 공갈, 폭행, 절도, 보이스피싱, 협박,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횡령, 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무면허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회사부도 등 생계형의 경우 골)
	사공문서 위조 등, 무고, 입찰공사수주 일감 몰아주기,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병역기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병역기피 : 본인이 병역법 위반 처벌 받은 경우)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시(민사 손해배상 포함)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학 처분 시 형사처분 시(기소유예 포함) (본인이 처분을 받은 경우)

○ 조사 대상

-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21대 의원 중 전과 보유자는 총 70명이며, 이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전과 보유자는 33명(52건)이었음(전체명단은 별첨).

〈표3〉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과 보유 현황

	인원	건수
강력범죄	1명	1건
공무	6명	6건
음주운전	19명	24건
뇌물범죄	1명	1건
사업 관련	6명	7건
선거·정치자금범죄	6명	8건
재산범죄	2명	2건
기타 파렴치범죄	3명	3건
민주화운동 제외 일반 전과 총합	중복 제외 33명	52건
민주화운동 관련	51명	70건
전체 전과 총합	중복 제외 70명	122건

* 강력범죄 : 강도상해
 공무 관련 : (특수) 공무집행방해 외, 공용물건손상, 농지법 외
 음주운전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외, 무면허운정, 교통사고처리특혜법위반
 뇌물범죄 : 알선수재 외
 사업 관련 :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저작권법, 건축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선거범죄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재산범죄 : 업무상 횡령, 특가법 외
 파렴치 관련 : 문서위조 외, 사기, 무고죄
 민주화운동 관련 :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소요,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21대 의원 중 21대 국회 기간 동안 재판을 받거나, 형을 확정받은 의원은 총 22명임(전체명단은 별첨).

〈표4〉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1대 국회 기간 재판진행 및 형 확정 현황

혐의	인원	건수
성범죄	1명	1건
공무 관련	3명	3건
뇌물범죄	4명	4건
선거·정치자금범죄	9명	9건
재산범죄	2명	2건
파렴치 관련	3명	3건
총합계	22명	22건

* 성범죄 : 강제추행치상 등
 공무 관련 : 패스트트랙사건(공동폭행)
 뇌물범죄 : 특가법상 알선수재, 배임, 정당법 위반
 선거·정치자금범죄 :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재산범죄 : 부동산거래법 위반, 농지법 위반
 파렴치 관련 : 사기, 업무방해 등

-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33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26명이었지만, 적용조건에 해당하는 의원은 단 4명인 것으로 파악됨.
 - 이학영 의원(강도상해, 징역 42개월),¹⁾ 김홍걸 의원(알선수재 외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6개월),²⁾ 김민석 의원(정치자금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4개월),³⁾ 신정훈 의원(특가법 외, 징역 36개월에 집행유예 48개월 등)⁴⁾ 등임.
- 한편,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총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17명으로 나타나지만, 적용조건에 부합하는 의원은 단 4명에 불과함.
 - 임종성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⁵⁾ 박완주 의원(보좌진 성추행, 하급심 판단 없음),⁶⁾ 이상직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⁷⁾ 최강욱 의원(업무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임.⁸⁾

〈표5〉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적격심사 기준 적용 현황

	전과보유 및 재판진행	민주화 운동 제외 일반 전과 보유 및 혐의 (A)	부적격 항목 해당(B)		
			부적격 항목 해당(B)	적용 기준 해당(C)	적용 비중(C/A)
전과	70명 (122건)	33명 (52건)	26명 (39건)	4명 (4건)	12.1% (7.7%)
21대 국회 재판진행 및 전과	22명 (22건)	22명 (22건)	17명 (17건)	4명 (4건)	18.2% (18.2%)
총합	중복제외 83명 (144건)	중복제외 49명 (74건)	중복제외 40명 (55건)	8명 (8건)	16.3% (10.8%)

2) 국민의힘

○ 조사 기준

- 1) 이학영 의원은 강도상해 징역 42개월로 더불어민주당 부적격 기준 중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기준 강력범에 해당하나, 군포시 지역구로 출마하였음.
- 2) 김홍걸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으나, 이와 별개로 알선수재 집행유예 처분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적격 기준에 걸림.
- 3) 김민석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며 SK 손길승 회장에게서 2억원 수수한 뒤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받았음.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출마하였음.
- 4) 신정훈 의원은 특가법, 보조금법을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 받았음. 현재 전남 나주시화순군에 출마하였음.
- 5) 임종성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형 확정으로 출마 불가함.
- 6) 박완주 의원은 보좌진 성추행으로 당에서 제명당했음. 출마 여부는 미정임.
- 7)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 현재 수감 중으로 출마 불가함.
- 8) 최강욱 의원은 업무방해 등 파렴치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 출마 불가함.

- 국민의힘은 2024년 1월 3일 공천관리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 발표한 부적격배제 기준을 참고함.

〈표6〉 국민의힘 부적격심사기준

분류	해당 범죄	적용조건
신4대악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4대 부적격 비리	자녀와 배우자의 입시비리, 자녀와 배우자의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의 병역비리, 본인 및 자녀의 국적비리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파렴치 범죄	강력범죄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뇌물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 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성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 원천 배제
	재산범죄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선거범죄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도주차량(뺑소니) 음주운전 등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시 원천 배제 하고, 윤창호법 시행 (2018.12.18.)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

○ 조사 대상

-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 받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22명이며, 이 중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일반 전과를 가진 의원은 20명으로 조사되었음(명단은 별첨 참고).

〈표7〉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과 보유 현황

	인원 수	건수
강력범죄	1명	1건
공무 관련	1명	1건
음주운전 관련	13명	15건
사업 관련	3명	4건
선거·정치자금범죄	1명	1건

재산범죄	1명	1건
파렴치관련	1명	1건
총합계	중복제외 20명	24건
민주화운동 관련	2명	3건
총합계	중복제외 22명	27건

- * 강력범죄 : 폭력행위
- 공무 관련 : 특수공무집행방해
- 음주운전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 사업 관련 : 소방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법
- 선거·정치자금범죄 : 공직선거법
- 재산범죄 : 상법 외
- 파렴치범죄 : 무고
- 민주화운동 관련 : 국가보안법, 집시법**

-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21대 국회의원 중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을 확정받은 의원은 총 13명임(명단은 별첨 참고).

<표8>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1대 국회 기간 재판진행 및 형 확정 현황

	인원	건수
공무 관련	7명	7건
뇌물범죄	2명	2건
선거·정치자금범죄	3명	3건
기타 파렴치범죄	1명	1건
총합계	13명	13건

- * 공무 관련 : 특수공무집행방해
- 부정부패 관련 :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등
- 선거 정치자금 관련 : 정치자금법 위반
- 파렴치 관련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 민주화운동 외 일반 전과 경력 보유한 의원 20명 중 16명이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심사 항목에 해당하나, 실제로 이 기준이 적용되는 의원은 박성민 의원(폭력행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4개월)⁹⁾ 1명에 불과함.
- 한편,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의원은 5명이나, 까다로운 적용조건으로, 실제 부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의원은 정찬민 의원(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7년, 벌금 5억 원)¹⁰⁾ 1명 뿐임.

9) 박성민 의원은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확정으로 국민의힘 기준 강력범죄(혹인 파렴치범죄)에 해당하나, 울산 중구에 출마하였음.
 10) 정찬민 의원은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확정되어 출마 불가함.

〈표9〉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적격심사 기준 적용 현황

	전과보유 및 재판진행	민주화 운동 제외 일반 전과 보유 및 혐의 (A)	부적격 항목 해당(B)	적용 기준	
				해당(C)	비중(C/A)
전과	22명 (27건)	20명 (24건)	16명 (18건)	1명 (1건)	5.0% (4.2%)
재판진행자	13명 (13건)	13명 (13건)	5명 (5건)	1명 (1건)	7.7% (7.7%)
총합	중복제외 34명 (40건)	중복제외 32명 (37건)	중복제외 20명 (23건)	2명 (2건)	6.3% (5.4%)

3) 양대정당 공통 6대 부적격심사기준 적용 시

- 지금까지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기준을 적용하였음.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할 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부적격 심사기준을 추려, 비교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통적으로,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부적격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10〉 양대정당 공통 부적격심사항목

부적격 기준	(예)
강력범죄	살인, 강도, 폭력
뇌물범죄	뇌물, 알선수재, 정당법 위반
재산범죄	횡령, 배임, 상법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성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도주차량, 음주운전

- 먼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전과경력 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 25명, 국민의힘 15명으로 나타남. 총 40명임. 하지만 이 중 양대정당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으로 5명에 불과함.

〈표11〉 양대정당 공통 부적격심사항목 해당 전과경력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강력범	1명(1건)	1명(1건)
뇌물범죄	1명(1건)	0명(0건)
선거범죄	6명(8건)	1명(1건)
재산범죄	2명(2건)	1명(1건)
음주운전 관련	19명(24건)	13명(15건)
합계	중복제외 25명(36건)	중복제외 15명(18건)

- 한편, 이 기준으로,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5명으로, 총 21명임.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대정당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으로 5명에 불과함.

〈표12〉 양대정당 공통 부적격심사항목 해당 21대 국회 재판진행 및 형 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강력범	0명(0건)	0명(0건)
뇌물범죄	4명(4건)	2명(2건)
선거범죄	9명(9건)	3명(3건)
재산범죄	2명(2건)	0명(0건)
성범죄	1명(1건)	0명(0건)
음주운전 관련	0명(0건)	0명(0건)
합계	중복제외 16명(16건)	중복제외 5명(5건)

- 과거 전과를 보유하거나, 21대 국회 재판 진행 중인 21대 의원 중 거대양당 공통 6대 부적격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의원은 중복 제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39명(3건 해당 1명, 2건 해당 11명, 1건 해당 27명), 국민의힘 20명(2건 해당 3명, 1건 해당 17명)임. 양당을 종합하면, 21대 국회의원 중 과거 전과를 보유하거나, 21대 국회 재판 진행 중인 의원 중 거대양당 공통 6대 부적격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의원은 중복 제외 총 59명임(〈별첨〉 참고).

〈표13〉 양대정당 공통 부적격심사항목 해당 과거 전과 및 21대 국회 재판진행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강력범	1명(1건)	1명(1건)
뇌물범죄	5명(5건)	2명(2건)
선거범죄	15명(17건)	4명(4건)
재산범죄	4명(4건)	1명(1건)
성범죄	1명(1건)	0명
음주운전 관련	19명(24건)	13명(15건)
합계	39명(52건)	20명(23건)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 양당 부적격심사 적용조건에 해당하는 의원은 10명으로, 59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임.

4. 요약 및 경실련 주장

- 공천 과정에서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천 과정에서 설정된 부적격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적용 요건으로 인해 부적합한 후보들이 엄격하게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음.
 - 첫째, 두 정당 모두 전과 기록을 가진 현역 의원이 일정 비율로 존재하나,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했는지 의문임.
 - 둘째, 두 정당에서 부적격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적용조건으로 부적격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이 확정된 의원도 상당수 있으나,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여 공천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밖에도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임.
 - 첫째, 공천기한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공천기한을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으로 설정하고, 비례대표 공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헌 또는 당규에 관련 절차를 명시하며, 후보자 추천 과정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질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함. 양대정당은 엄격한 적용조건을 완화하여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외조항도 삭제해야 함.
 - 셋째, 현역 의원의 평가 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이는 공천 과정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넷째, 경실련이 발표한 자질 의심 및 미달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되어야 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며,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경실련은 앞으로도 공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임. 그 일환으로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배제 및 자질의심 의원의 공천 여부를 조사해 발표할 것임.

<전체 명단>

더불어민주당 명단

과거 전과(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미포함)						
시도 선거구명	성명	전과	징역(월)	해당 여부	적용 여부	출마 여부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허영	음주운전(2005년)	벌금 100만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영순(무소속)	근로기준법(2001년)	벌금 150만원			
경기도 부천시정	서영석	식품위생법	벌금 100만원			
경기도 부천시정	서영석	업무상횡령	벌금 200만원	○		
경기도 부천시정	서영석	음주운전(2015년)	벌금 100만원	○		
경기도 파주시을	박정	저작권법	벌금 500만원			
경기도 파주시을	박정	도로교통법	벌금 100만원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강도상해	징역 42개월	○	○	군포시 지역구 출마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무소속)	도로교통법 외(1994년)	벌금 200만원	○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무소속)	공직선거법 외	징역 18개월, 집행유예 36개월	○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무소속)	음주운전(2007년)	벌금 150만원	○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공무집행방해외	벌금 300만원			
경기도 광주시갑	소병훈	도로교통법 외(1994년)	벌금 150만원	○		
경기도 광주시갑	소병훈	음주측정거부(2009년)	벌금 300만원	○		
경기도 용인시병	정춘숙	문서위조 외	징역 12개월, 집행유예 24개월, 몰수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김철민	건축법	벌금 500만원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김철민	음주운전(2000년)	벌금 150만원	○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김철민	건축법	벌금 700만원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김철민	음주운전(2002년)	벌금 300만원	○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공무집행방해외	벌금 300만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음주측정거부	벌금 150만원	○		

		(2000년)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윤영덕	음주운전(2010년)	벌금 100만원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음주운전(2003년)	벌금 300만원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사기	벌금 500만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이상민 (국민의힘)	음주운전(2004년)	벌금 100만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	음주운전(2000년)	벌금 150만원	○		
비례대표 5	이동주	도로교통법 외 (2000년)	벌금 200만원	○		
비례대표 11	최혜영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	○		
비례대표 14	김홍걸	알선수재 외	징역 18개월, 집행유예 36개월	○	○	불출마
비례대표 17	양경숙	공직선거법 외	벌금 100만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음주운전(2009년)	벌금 100만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을	이용선	음주운전(2001년)	벌금 100만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을	이용선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을	기동민	공무집행방해 외	벌금 400만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정치자금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4개월	○	○	서울영등포출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을	진성준	공용물건손상	벌금 4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을	강준현	공직선거법	벌금 300만원	○		
울산광역시 북구	이상헌 (무소속)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		
울산광역시 북구	이상헌 (무소속)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음주운전(2002년)	벌금 150만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이성만 (무소속)	정보통신망법	벌금 700만원	○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음주운전(2000년)	벌금 150만원	○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농지법 외	벌금 150만원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특가법 외	징역 36개월, 집행유예 48개월	○	○	전남나주화

						순 출마
충청남도 천안시갑	문진석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100만원			
충청남도 아산시을	강훈식	무면허운전(2003년)	벌금 100만원	○		
충청남도 아산시을	강훈식	교통사로처리특례법위반(2011년)	벌금 150만원	○		
인천 계양구을	이재명	무고죄	벌금 150만원	○		
인천 계양구을	이재명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인천 계양구을	이재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500만원			
21대 국회 기간 재판진행 및 형 확정						
서울 성북구을	기동민	라임 사건(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진행 중	○		
경기 부천시갑	김경협	부동산거래법위반	1심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 무죄, 3심 진행 중			
성남 분당을	김병욱	패스트트랙 사건(공동폭행·상해)	1심 진행 중			
서울 마포갑	노웅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1심 진행 중(위헌법률심판 제청)	○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농지법 위반	1심 진행 중, 벌금 200만원			
대전 서구을	박범계	패스트트랙 사건(공동폭행·상해)	1심 진행 중			
서울 은평구갑	박주민	패스트트랙 사건(공동폭행·상해)	1심 진행 중			
서울 구로구을	윤건영	허위 인턴 등록(사기)	1심 : 벌금 500만원, 2심 진행 중	○		
비례대표	이수진	라임 사건(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진행 중	○		
인천 계양구을	이재명	대장동 특혜 개발 등(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배임 등·제3자뇌물제공)	1심 진행 중	○		
전북 익산시을	한병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공직선거법 위)	1심 : 무죄, 2심 진행 중	○		

		반)				
대전 중구	황운하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 징역 3년, 2심 진행 중	○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무소속)	보좌진 성추행 (강제추행치상 등)	1심 진행 중	○	○	미정
인천 남동구을	윤관석 (무소속)	돈봉투 수수 사건(정당법 위반)	1심 : 징역 2년 선고, 2심 진행 중	○		
비례대표	윤미향 (무소속)	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사기 등)	1심 : 벌금 1500만원, 2심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심 진행 중	○		
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무소속)	돈봉투 수수 사건(정당법 위반)	1심 진행 중	○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정순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경기 안성시	이규민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		
전북 전주시을	이상직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수감중 출마불가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직 상실)	업무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형 확정 출마불가
비례대표	김홍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신고	벌금 80만원	○		
경기 광주시을	임종성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 원심과 동일, 3심 : 2월 8일 원심 판결 확정	○	○	징역형 확정으로 5년간 출마불가

국민의힘 명단

과거 전과						
시도명/선거구명	성명	전과 1	징역(월)	해당 여부	적용 여부	출마 여부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양수	음주운전(2004년)	벌금 250만원	○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공직선거법	벌금 200만원, 몰수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음주운전(2008년)	벌금 150만원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음주운전(2013년)	벌금 100만원	○		
경상남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조해진	음주운전(2002년)	벌금 150만원	○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도로교통법	벌금 200만원	○		
경상북도 구미시갑	구자근	도로교통법	벌금 100만원	○		
경상북도 구미시갑	구자근	음주운전(2005년)	벌금 150만원	○		
경상북도 상주시문경시	임이자	도로교통법	벌금 100만원	○		
경상북도 안동시에천군	김형동	음주운전(2009년)	벌금 100만원	○		
대구광역시 동구을	강대식	음주운전(2013년)	벌금 250만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무고	벌금 300만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백종현	소방법위반	벌금 100만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김희곤	음주운전(2004년)	벌금 100만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주환	음주운전(2007년)	벌금 100만원	○		
비례대표 3	한무경	폐기물관리법	벌금 100만원			
비례대표 4	한무경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200만원			
비례대표 19	허은아 (사퇴)	음주운전(2006년)	벌금 100만원	○		
비례대표 20	허은아 (사퇴)	음주운전(2009년)	벌금 200만원	○		
울산광역시 동구	권명호	상법 외	벌금 400만원	○		
울산광역시 중구	박성민	폭력행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4개월	○	○	울산 중구 출마
울산광역시 중구	박성민	음주운전(2003년)	벌금 100만원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건설업법	벌금 300만원			
21대 국회 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						
경북 포항시북구	김정재	패스트트랙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진행 중			
경북 군위군의성군	김희국	쫓개기 후원금	1심 진행 중	○		

청송군영덕군		의혹(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 서초구	박성중	패스트트랙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진행 중			
경북 김천시	송언석	패스트트랙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진행 중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윤한홍	패스트트랙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진행 중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패스트트랙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진행 중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철규	패스트트랙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진행 중			
부산 사상구	장제원	패스트트랙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진행 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진석	전 노무현 전 대통령부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1심 : 징역 6개월, 2심 진행 중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하영제 (무소속)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진행 중	○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무소속)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진행 중	○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의 불법 후원금 모금	벌금 1,000만원	○		
경기 용인시갑	정찬민 (의원직 상실)	특가법상 뇌물 등(징역 7년, 벌금 5억원)	징역 7년, 벌금 5억원	○	○	형 확정으로 출마 불가